

중국 「영화산업촉진법」,
그리고 한한령이 미치는 영향

KOFIC

중국 「영화산업촉진법」, 그리고 한한령이 미치는 영향

「중화인민공화국영화산업촉진법」 핵심 안내

글 : 송경원, 하정민

발행인 김세훈

발행일 2016년 12월 13일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14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2016

Contents

01

들어가는 글 / 1

02

총칙, 영화산업 지원과 소문 아닌 사실이다 / 1

03

[BOX 1] 박스오피스 조작, 소문 아닌 사실이다 / 2

04

「영화산업촉진법」의 명암 / 5

05

한한령(限韓令)이 한중 영화산업에 미칠 영향 / 6

06

[Box 2] 「중화인민공화국영화산업촉진법」 / 8

1. 들어가는 글

지난 11월 7일 열린 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영화산업촉진법」(이하 「영화산업촉진법」) 최종안이 통과됐다. 중국 영화산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한 이번 법안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영화>는 「영화산업촉진법」의 핵심 내용과 주요 조항의 의미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최근 TV는 물론 온라인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한한령'(한류 콘텐츠 금지령, 限韓令)이 한중 영화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알아보았다. 글 말미에는 「영화산업촉진법」 전문을 번역·수록했다.

1996년 공포된 「영화관리조례」는 2001년 한 차례 개정됐을 뿐 이후 긴 시간 동안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영화산업촉진법」은 그런 의미에서 실로 오랜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법제도의 쇄신과 변화의 결과다. 「영화산업촉진법」은 행정법규에 해당하는 기존 국무원 조례보다 상위의 법률적 지위를 지닌 강령으로, 향후 파생되는 법률이나 조례 등의 근간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영화업'이 아니라 '영화산업'의 촉진을 천명함으로써 향후 중국정부에서 영화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영화관리조례」가 영화의 '관리와 통제'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촉진과 진흥'이라는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조항이나 조례가 실제 영화산업계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중국 문화산업 중 입법이 된 분야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 비춰볼 때 조례가 아닌 법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중국 내 관련 인사들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각종 심의 절차의 간소화, 저작권 보호 등 산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 총칙, 영화산업 지원과 육성에 초점

「영화산업촉진법」의 전체적인 기조는 '영화산업의 번영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하며, 인민대중의 사상·도덕 자질과 과학문화 자질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제1장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영화산업 개혁 이후 급성장 중인 시장 상황에 발맞춰 산업 육성은 물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확고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졌고, 이에 법률을 통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제1장 총칙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방향을 읽을 수 있는데, 조례의 총칙이 제작·수출입·배급·상영을 위한 허가 중심인데 반해 「영화산업촉진법」은 현금 이상 인민정부의 지원정책 수립 의무, 영화기술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인재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산업 촉진을 위해 무제한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건 아니다. 관리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은 강화하는 의미에서 산업의 총체적인 점검을 시도하는 쪽에 가깝다. 가령 제1장 제4조 '국가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인도하고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향을 견지한다'는 대목에서 해당 법안의 전체적인 지향점을 알 수 있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되 창작 방향의 인도를 명시함으로써 영화 관련 지도 사상과 창작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 중심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문화와 사회주의적 가치를 장려하는 영화,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영화'라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5조 '현금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현지 상황에 따라 영화산업의 발전을 해당 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항목은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기존

의 지방 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던 정책을 포함해 각 지방 정부에 정책적·금전적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부여함으로써 지원의 총체적인 확대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국가는 영화 및 관련 산업정책을 제정해 획일적으로 개방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영화시장 형성을 인도’한다는 항목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존에 실시돼온 조항들의 연장과 재확인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각 자치정부가 자의적으로 실시하던 정책에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물론 기존에 무관심하던 단체에게도 의무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전체적인 육성 움직임에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다. 이는 제8조 ‘국무원 영화주관부서에서 전국의 영화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현금 이상 지역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에서 해당 행정지역의 영화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는 조항과 연계돼 지방 정부와 국무원의 역할과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6조 ‘국가는 영화 과학기술의 개발 및 운영을 권장하고 영화기술 표준을 제정·보완하며 기업이 주체가 돼 시장을 주도해 (산학연이 결합된) 영화기술 혁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조항은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영화기술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CG를 비롯한 특수효과 기술에서 중국영화는 이미 할리우드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단계를 넘어 그다음을 모색하는 수준”으로 향후 3D 영화와 같이 시장을 하드웨어적으로 선도하는 기술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며, 이를 중국 영화시장 주도로 재편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VR 등 특수 상영관의 숫자를 세계 어느 곳보다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추세다. 한편, 할리우드를 비롯한 해외 영화시장에서 특히 주목하는 조항은 제7조다. ‘영화 관련 지적재산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을 불문하고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제7조는, 그간 중국 영화시장 성장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적됐던 불법 복제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흥행 매출을 투명화하겠다는 조치(제34조) 역시 할리우드에서 반기는 대목이다. <할리우드리포터>에 따르면 “2015년 극적으로 확대됐던 티켓 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 성장세는 불법적인 영화티켓 사재기가 한 원인”이며, 이번 「영화산업촉진법」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 조항이 마련됐다는 점(제51조)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Box 1]

제목: 박스오피스 조작, 소문 아닌 사실이다

중국의 박스오피스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11월 28일자 기사)는 국가영화사업발전전문기금관리위원회의 리동 부회장이 “중국 내 모든 톱 흥행작이 박스오피스 수익을 날조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즉, 중국 본토에서 개봉한 중국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티켓 판매 수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이 기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내 통신사인 신화통신사가 하루 전날인 27일 보도한 리동의 발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신화통신사에 따르면 리동은 “중국 영화관에서 상영한 모든 흥행 영화의 배급사는 그들의 박스오피스 영수증을 날조했다.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 영화산업 안팎에서 박스오피스 조작 관련 루머는 기정사실처럼 떠돌았지만 공식 기관 차원에서 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동의 발언은 11월 18일 개봉한 평샤오강 감독의 사회 풍자극 <아부시반금련 我不是潘金蓮>의 미심쩍은 흥행 이후 나왔다. 중국 인기 배우 판빙빙이 주연을 맡고 평 감독에게 올해 금마장 감독상을

안겨준 이 영화는, 개봉 11일 만에 흥행 수입 3억 3600만여 위안을 달성했다. <아부시반금련>은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다 일주일 만에 <신비한 동물사전>과 <모아나>에게 그 자리를 내줬는데, 정부 관료는 단기간에 이만큼의 기록적인 흥행을 기록한 배후에 '검은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에서 영화 티켓 판매를 조작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극장에서 그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다." 신화통신사가 보도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의 리한옌 연구원의 말이다. 그는 배급사가 판매 수량을 늘리기 위해 직접 티켓을 샀다고 밝혔다. 더불어 몇몇 배급사는 극장과 거래해 심야 상영관을 매수했을 것이라며, 그간의 의혹이 사실임을 주장했다. 그동안 중국 영화배급사는 관객이 거의 없는 자정을 넘어선 시간대에 '유령 상영관'을 운영하거나 사재기를 통해 티켓 판매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박스오피스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급사가 박스오피스 성적을 조작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흥행 물이'를 위해서다. 리한옌은 "극장과 밀거래한 배급사는 개봉 후 며칠 동안 박스오피스에 손대면서 영화에 대한 입소문을 퍼트린다"며 이러한 티켓 판매 부풀리기는 중국 영화산업의 공통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박스오피스 영수증 조작은 중국 영화산업이 급부상한 수년간 끝없이 흘러나온 얘기다. 온라인상으로 예매율이 만석인 영화를 보러 들어갔더니 극장이 텅텅 비어 있었다는 후기는 중국 현지 리뷰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암암리에 떠돌던 중국 박스오피스 조작 의혹이 수면 위에 올라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개봉한 <몬스터 헌트> 때부터다. 중국 역대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몬스터 헌트>의 배급사 에드코 필름Edko Films Ltd.은 '무료 상영관'을 운영하는 데에 400만 위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몬스터 헌트>는 7월 말 중국 본토에서 개봉했는데, 에드코는 이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24억 위안을 벌어들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같은 시기 개봉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의 수익보다 200만 위안 많은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박스오피스 수치 내에서 다시 계산해보면 <몬스터 헌트>의 수익이 <분노의 질주: 더 세븐>보다 오히려 200만 위안이 적은 셈이다. 중국 국영방송사 CCTV는 에드코가 자사 소유의 극장 29곳에서 티켓을 대량 구매해 관객에게 뿌린 것으로 보도했다. 뒤이어 터진 지난 3월 <엽문3: 최후의 대결>(이하 <엽문3>)의 박스오피스 날조는 정부 당국의 처벌을 받을 정도로 논란에 휩싸였다. 3월 4일 현지 개봉한 <엽문3>는 상영 4일도 안 돼 5억 위안을 돌파한 것으로 기록됐다. 웨이보 등 현지 SNS에는 이상 기록에 대한 의구심이 퍼졌고, 광전총국은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3월 말 <엽문3>의 배급사인 베이징 맥스 스크린Beijing Max Screen은 7,600개의 상영관을 매수하고 그곳에서 5,600만 위안의 수익을 조작한 혐의를 인정했다. 베이징 맥스 스크린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조작에 관여한 73개의 극장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최근 몇 년간 떠돌았던 중국 박스오피스의 기록적인 성장세에 대한 의혹을 촉발했다. 올 초 광전총국은 2016년 1분기 중국 극장 매출이 144억 7천만 위안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96억 6천만 위안)보다 50% 이상 급등했다고 밝혔다. 중국 역대 최고 흥행작으로 기록된 <미인어>가 개봉한 2월에는 북미 박스오피스 수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박스오피스(www.cbooo.cn)가 공개한 2월 박스오피스 수익은 68억 8천만 위안(10억 5천만 달러)으로 2월 북미 박스오피스 수입인 8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할리우드리포터> 등 미국 영화전문지 및 업

계 전문가는 중국 박스오피스가 2017년에는 북미를 제치고 세계 최대 영화시장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표면으로 드러난 일련의 날조 사건 이후 이런 전망은 기한 없이 보류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입증하듯, 파죽지세였던 중국 박스오피스 성장세는 1분기부터 주춤하기 시작했다. 2016년 상반기 박스오피스 매출 성장세를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가 증가하긴 했지만 2015년 상반기의 50%의 성장세에 비하면 절반 이상 감소했다. 3분기에는 8.3%까지 떨어졌다. 올해 스크린 수가 31,500개에서 40,000개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상반기 성장 둔화세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먼저 중국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됐고, 스크린 수가 증가한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아니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온라인 예매사이트 위잉 테크놀로지WeYing Technology의 부회장 루크 시앙은 “완성도 높은 작품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엔 중국영화나 외화 모두 매력적인 콘텐츠가 많지 않았다. 같은 기간 북미시장을 봐도 지난여름과 비교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온라인 예매사이트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사실도 성장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중국 내 주요 온라인 티켓팅 플랫폼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영화표 판매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관객은 정가보다 싼값에 영화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할인율이 5월부터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현재 시장 상황을 이야기했다. 당국이 불법적인 할인율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영화 티켓의 약 80%는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다. 미국의 온라인 판매율이 30%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수치다. 무엇보다 <베이징상보(北京商報)> 등 현지 언론과 업계는 중국 당국의 박스오피스 규제를 성장세 둔화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박스오피스 기록 조작에 철퇴를 내리면서 영화시장에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지난 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영화산업촉진법」 최종안에 초안에 없던 박스오피스 규제 개선안이 들어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스오피스를 조작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최고 처벌로 배급허가증의 발급을 취소하고, 각 영화관은 티켓 1장을 판매하면 10분 내로 당국에 이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박스오피스에 포커스를 맞춘 새로운 영화진흥법안이 거론됐다. 광전총국은 티켓 판매를 날조하는 회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극장 내에 CCTV를 달아 실제 관객 수와 티켓 판매 수를 비교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이러한 규제와 처벌 직후 박스오피스의 고공 행진이 멈췄으니, 중국영화계 안팎에서 그간의 기록에도 의구심을 갖게 된 상황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영화산업 전반이 성장기에 있어 앞으로도 연간 20~30% 수준으로 중국 박스오피스 매출 신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스크린 수 또한 북미 43,000개에 가까이 간 만큼, 북미 박스오피스를 언젠간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글_하정민

하지만 동시에 모호한 지점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윤리 강령들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작권에 대한 처벌, 규제의 간소화 등은 구체적으로 서술된 데 반해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나 윤리 강령은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조항을 신설해 그 방향성이 한층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제1장 제11조에서 ‘국가는 평등과 상호 이익을 원칙으로 영화산업의 국제합작과 교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국외의 영화제(전)에 참석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산업의 대외 개방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는 후반작업 등은 반드시 중국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해외 진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조례에 있던 영화 수출입 허가 의무와 수출입 수속에 관한 조항이 아예 빠진 것도 이를 증명한다. “시장 보호를 위한 규제와 할당량 등을 상당 부분 완화한 법률”이란 외신의 평가는 이에 기인한다. 제2장 ‘영화창작 및 제작’ 부문을 살펴보면 종전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장 제13조에 따르면 ‘영화 시나리오와 시놉시스는 국무원 영화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하는데 영화 소재가 국가 안전, 외교, 민족, 종교, 군사 등일 경우에만 시나리오를 제출해 심사하고, 기타 경우엔 시놉시스만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 지점에서 규제가 일방적으로 완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외국 기업이나 개인은 여전히 단독으로 중국 내에서 영화제작을 진행할 수 없고, 제2장 제14조 ‘중국의 명예와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 안정에 해를 끼치거나 민족의 감정을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유발하는 해외 단체와 협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차적인 간소화는 이뤄졌지만 콘텐츠에 대한 검열 기준을 선명하게 함으로써 역으로 또 다른 장벽이 설치됐다는 견해도 있다. 제2장 제16조에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선양하는 내용, 국가 종교정책 파괴를 선동하고 사이버 종교와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등 중국정부에서 금기시하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이드라인이 뚜렷하게 제시돼 중국정부가 허용하는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의 기준이 확실하게 적시된 것은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는 여기에 기인한다. 콘텐츠에 대한 간섭이라는 반발과 동시에 해당 주제를 제외한 영화의 제작 문턱을 낮춰 산업적인 선명성을 분명하게 가져가는 측면도 있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3. 「영화산업촉진법」의 명암

「영화산업촉진법」은 이름 그대로의 법령이다. 중국의 영화산업을 촉진하겠다는 명확한 방향 아래 규제 완화와 산업으로서의 영화 지원, 인재 육성을 기동으로 하고 있다. 1년에 600편 이상의 영화를 쏟아내며 할리우드에 이어 세계 2위의 영화시장으로 성장한 중국 영화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확충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법안의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방향성과는 무관하게 미흡한 지점이나 정반대로 다양성, 혹은 시장경제에 입각한 육성과 상충하는 지점도 적지 않아 보인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임대근 교수는 이번 법령을 “중국정부의 영화산업 통제 강화·공식화·법제화”로 요약했다. “기존에 있던 조례를 근간으로 그간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확대·보완한 형태의 법령”으로 “표면적으로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심사제도를 재신임하고 한층 공고히 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영화산업촉진법」은 제작·배급·상영 등 분야를 세분화해 시스템을 일일이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규제 강화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제4장 ‘영화산업 지지 및 보장’의 제36조에서 ‘국가는 다음의 영화를 창작·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중국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선양하는 소재의 영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선동 영화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영화’(2항)의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만큼 남용될 우려가 있고, ‘국가가 지지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영화’(5항)에 ‘필요한 세수우대정책을 실시’(제38조)를 공언한 것은 단지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주도의 영화 계도의 성격을 강화한 측면이 상당하다. 이처럼 콘텐츠의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의 효과는 미미하고, 고전적인 방식으로 정부 통제 시스템 속으로 확고하게 편입시키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는 게 임 교수의 분석이다. 금지되는 소재와 심사에 대해 국가

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에 책임과 권한을 일임함으로써 하부 단위의 자치구 인민정부는 오히려 자체적인 규제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익명의 중국영화 관계자는 “사전 심의와 각종 규제의 책임을 지방 정부에 분산시킨 것이 문제다.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방에서는 자의적으로 규제를 더 강화해서 적용할 우려가 있다. 전체적으로 자체적인 기준선이 엄격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할리우드리포터>를 비롯한 외신에서도 중국정부의 검열·통제 강화 요소를 지적하며 이것이 투자자의 보수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없진 않다. 대표적으로 ‘영화시장 발전 수요에 따라 영화관 건설 및 개조를 도시·농촌 건설의 총체적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제39조)는 하드웨어적인 강화와 지원, 보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콘텐츠 부분에서는 최근 중국 당국의 문화정책 전반의 경색된 분위기를 반영해 후퇴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금지하는 주제와 권장하는 영화에 대한 세세한 가이드라인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등급제의 누락이 실망감의 원인 중 하나다. 임대근 교수는 “사전·사후 심의제도의 완화와 등급제도 신설은 대외적으로 중국영화의 창조적인 제작과 다양성을 위해 꾸준한 요구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영화산업과 제작 전반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강화된 증거라고 강조했다. 심의제도의 경우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실제 기준은 모호하거나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강화됐고,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되는 모양새다. 임 교수는 이를 “중국정부가 영화를 민간의 자율 시스템하에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했다. 등급제도의 경우 실질적으로 허가와 불허, 두 가지밖에 없는 기존 정책에서 변화될 것이 없는 데, 등급 기준을 신설하는 순간 기존 심사제도를 완화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변화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등급제도가 마련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문화예술계 전반의 경색된 분위기에서는 요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아쉬움이 당장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 「영화산업 촉진법」은 기존의 조례들을 상위 법령으로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공고히 했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곧장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 대부분의 반응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산업을 정부 통제하에 두려는 방향성이 분명해 보이고, 몇몇 절차의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쟁 논리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기 때문에 중국 영화산업의 성장세와 무관하게 외국 자본의 경우엔 당분간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경제전문지들의 분석이었다.

4. 한한령(限韓令)이 한중 영화산업에 미칠 영향

‘광전총국이 한한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다수의 매체를 통해 전파된 후 중국 외교부와 광전총국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실제 업계에서는 중국과 연계된 프로젝트가 줄줄이 중단되며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공영 및 위성방송에서 한국영화와 드라마, 대중가요가 차례로 퇴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류 스타의 중국 내 출연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화책 연합 한국 본부장을 맡고 있는 빅스토리픽처스의 임건중 대표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보다 규제와 규율이 훨씬 강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감독이나 스타급 배우들, 투자 상황 등에서 규제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점차 한국 스태프까지 금지령이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사

각지대로 남겨졌던 영역까지 보이지 않는 규제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비에이엔터테인먼트의 장원석 대표는 “차레로 압박이 들어오는 걸 넘어 일시에 한꺼번에 단절된 상황”이라며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류 콘텐츠 전반에 대한 차단이 이뤄졌다. 어제까지 봄날이었는데 갑자기 한겨울 별판에 내던져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 부문의 경우 여러 경로로 교류가 있던 중국 자본이 일시에 철수한 상태라며 “과거 일본에서 한류가 사그라들 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단절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공식적인 지침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정부의 입장이 있는데 선불리 움직였다가 피해를 볼까봐 알아서 조심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영화산업촉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제합작과 교류 진행을 권장’(제11조)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명예와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 안정에 해를 끼치거나 민족의 감정을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유발하는 해외 단체와 협력할 수 없다’(제14조), ‘중국의 존엄, 명예와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 안정에 해를 끼치며 민족 감정을 손상하는 내용의 외국영화는 현상 인화·가공·후반 제작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22조)는 등 각종 세부사항에서 암묵적인 규제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 실행 기관의 해석과 의지에 따라 강력한 금제를 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한한령이 이러한 자의적인 규제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임대근 교수는 단순히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한 정치적 분쟁의 결과로만 이를 바라볼 수는 없음을 지적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이번 한한령은 돌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한류에 대한 견제와 불편한 기조가 감지됐다. 한류의 성행으로 인한 중국인들의 심리적 저항감을 간과할 수 없다. 친밀감만큼의 반발감이 생기기 마련인데,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어가는 상업주의적인 이미지와 함께 이러한 불편함이 커지고 있던 추세였다. 그것이 계기를 만나 돌출된 것이 이번 한한령이다.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사드 등의 정치적인 문제와 함께 내치에 관한 불만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여러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관계자들은 지금의 한한령이 여러 국면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인 위기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향후 대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장원석 대표는 “결국 정치적으로 풀 문제지만 이 국면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언젠가는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쌓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한류가 가라앉은 것을 반면교사 삼아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시장경제에서는 민간의 왕성한 거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룰이 생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나아가는 게 합당하다. 중국의 「영화산업촉진법」은 이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 아쉽지만 우리는 이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임건중 대표 역시 “이번 한한령이 영원한 차단은 아니다. 중국 관계자들도 언젠가는 기조가 바뀔 것을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바로 작품화를 하거나 촬영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추후의 국면 전환에 대비해 소강상태에서도 개발은 지속해야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해외 언론 일각에서는 이번 「영화산업촉진법」이 표면적으로는 지방 정부로의 정책 분산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규율과 기준을 강화, 혹은 선명하게 만드는 “보수적인 법안”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본의 검색이 예측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영화시장의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함께 대두된다. 이번 「영화산업촉진법」은 그 이름에 걸맞게 중국 영화산업의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분명히 일조할 정책이고,

이에 따라 시장 확대 역시 필연적이라는 해석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에는 시장이 커지고 해외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의 정책 기조도 바뀔 수밖에 없으리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깔려 있다. 분명한 것은 중국 영화시장은 이제 세계 2위 수준을 공고히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질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영화산업촉진법」의 다소 미진하고 아쉬운 구석에도 불구하고 법령 제정 자체가 영화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구체적인 법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긴 시간의 진통 끝에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본 다음에야 한국영화계도 변화에 발맞춘 다음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Box 2]

「중화인민공화국영화산업촉진법」

제1장 총칙

제1조 영화산업의 번영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며, 인민대중의 사상·도덕 자질과 과학문화 자질을 제고하고자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진행하는 영화창작, 제작, 배급, 상영 등 활동(이하 총칭해 '영화활동'이라 함)에 적용한다.

본 법에서 칭하는 '영화'란 시청 기술과 예술기법을 활용해 제작하고 필름 또는 디지털 매체에 담은 기록으로서 일정한 내용을 표현하는 유성 또는 무성의 연속적인 영상의 조합이며, 국가가 규정한 영화기술 기준에 부합되고 대중에게 상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을 가리킨다.

인터넷, 전산 네트워크, 방송망 등 정보망을 통해 영화를 전파하는 행위는 인터넷, 전산 네트워크, 방송망 등의 정보망 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적용한다.

제3조 영화활동에 종사할 경우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익과 경제적 이익의 통일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인도하고 백화제방(百花齐放), 백가쟁명(百家争鸣)의 방향을 견지하며 영화 창작인이 실제에 부합되고, 생활에 부합되며 대중을 가까이할 것을 제창하고 사상성, 예술성, 즐거움 등을 고루 갖춘 우수한 영화를 창작할 것을 권장한다.

제5조 국무원은 영화산업의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현지 상황에 따라 영화산업의 발전을 해당 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국가는 영화 및 관련 산업정책을 제정해 획일적으로 개방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영화시장의 형성을 인도하며 영화시장의 번영을 촉진한다.

제6조 국가는 영화 과학기술의 개발 및 운영을 권장하고 영화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보완하며, 기업이 주체가 돼 시장을 주도하고 산학연이 결합된 영화기술 혁신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7조 영화 관련 지적재산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을 불문하고 이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지적재산권 법률집행부서는 관련 조치를 취해 영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고, 법에 따라 영화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조사·처벌해야 한다.

영화활동에 종사하는 국민, 법인과 기타 단체는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하고, 지적재산권의 응용·보호와 관리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 법인과 기타 단체가 법에 따라 영화 캐릭터 상품 등 파생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8조 국무원 영화주관부서에서 전국의 영화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현급 이상 지역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에서 해당 행정지역의 영화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에서는 각자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영화 업무를 책임진다.

제9조 영화업계 단체는 법에 따라 업계의 자율 규범을 제정해 업무 교류를 진행하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배우, 감독 등 영화업계 종사자는 높은 도덕성과 예술성을 갖춰야 하며, 법률 법규 준수 및 직업윤리 엄수, 자율성을 강화해 좋은 사회적 이미지를 보여야 한다.

제10조 국가는 영화평가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고 영화평론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우수 영화 및 영화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뛰어난 기여를 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수여한다.

제11조 국가는 평등과 상호 이익을 원칙으로 영화산업의 국제협작과 교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국외의 영화제(전)에 참석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장 영화창작 및 제작

제12조 국가는 영화의 소재·장르·형식·수법 등에서 창의성을 권장하고 영화 학술 세미나와 업무 교류를 권장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영화주관부서는 영화창작의 필요에 따라 영화 창작인이 서민과 대중을 이해하고 생활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 편의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법인, 기타 단체는 영화 시나리오와 시놉시스를 국무원 영화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하고, 그중 중대 소재 혹은 국가 안전, 외교, 민족, 종교, 군사 등의 소재일 경우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영화 시나리오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영화 시놉시스 또는 시나리오가 본 법 제16조에 부합할 경우, 국무원 영화주관부서에서 제작될 영화의 기본 상황을 공고하고 국무원 영화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에서 등록증명을 발급하거나 허가 문건을 발부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영화주관부서에서 제정한다.

제14조 법인, 기타 단체는 국무원 영화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해외 단체와 합작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 단, 중국의 명예와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 안정에 해를 끼치거나 민족의 감정을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유발하는 해외 단체와 협력할 수 없으며, 앞에 서술한 행위를 하는 개인 역시 영화제작에 참여할 수 없다.

합작한 영화가 창작·투자·수익분배 등의 비례 요구에 부합할 경우, 이 영화를 중국 국내 법인, 기타 단체가 제작한 영화와 동일시한다.

해외 단체는 국내에서 단독으로 영화제작 활동을 진행할 수 없고, 외국인 역시 중국 내에서 영화제작 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제1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영화주관부서는 공안, 문화재 보호, 풍경 명승지 관리 등의 부서와

협조해 법인, 기타 단체를 위해 본 법에 따라 영화제작에 편의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영화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 보호, 문화재 보호, 관광명소 관리와 안전 생산 등의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제작 현장에 필요한 보호 및 보호장치의 설치를 진행해야 한다.

제16조 영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서는 아니 된다.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법률·행정법규의 실시를 반대하거나 파괴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

국가 통일,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국가 안전을 위협하며 국가 명예와 이익을 침해하고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선양하는 내용.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비방하고 민족 증오와 민족 질서를 선동하며 민족 풍속을 침해하고, 민족 역사 또는 민족 역사 인물을 왜곡하며 민족 감정을 자극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국가 종교정책 파괴를 선동하고 사이비 종교와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사회도덕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며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고 음란물·도박·마약을 선양하며 폭력·공포·범죄 교사 또는 범죄 방법을 과장해 전파하는 내용.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침해하는 내용.

타인을 모욕, 비방하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유포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17조 법인, 기타 단체의 제작 완료된 영화는 국무원 영화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에 송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무원 영화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는 신청을 접수해 30일 내에 심사 결정을 진행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영화에 대해 공영을 비준하고 영화공영허가증을 발급하며 이를 공포한다. 본 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영화는 공중에 상영할 것을 불가하며,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해 그 이유를 설명한다.

국무원 영화주관부서는 본 법에 따라 영화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정·보완해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영화 심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보완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고 전문가의 논증을 거쳐야 한다.

제18조 영화에 대한 심사는 최소 5인의 전문가팀을 구성해 평가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전문가는 평가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법인, 기타 단체가 전문가의 평가심사 의견에 이의가 있을 시 국무원 영화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는 별도의 전문가팀을 구성해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가 평가심사 의견은 심사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간주돼야 한다.

평가심사 전문가에는 전문가 명단에 있는 이와, 영화 소재에 따라 특별 초빙한 전문가가 포함된다. 전문가의 선정과 심사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영화주관부서에서 제정한다.

제19조 영화상영허가증을 획득한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다시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영화를 제작한 법인, 기타 단체는 획득한 영화상영허가증 표시를 영화의 시작 자막에 삽입해야 한다. 영화상영 시, 미성년자 등 관객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불편을 일으킬 경우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영화는 배급·상영하지 못하고 인터넷, 전산 네트워크, 방송망 등의 정보망을 통해 전파를 진행할 수 없으며, 오디오 제품으로 제작할 수 없다. 단, 국가의 별도

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21조 촬영과 제작이 끝난 뒤,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한 영화만 영화제(전)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 영화제(전)에 참가할 경우, 참가할 법인 및 기타 단체는 해당 해외 영화제(전)가 개최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국무원 영화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22조 국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외국영화의 현상 인화·가공·후반 제작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존엄, 명예와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 안정에 해를 끼치며 민족 감정을 손상하는 내용 등의 외국영화는 현상 인화·가공·후반 제작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제23조 국가가 설립한 영화문서보관기구는 법에 따라 영화문서를 접수·수집·정리·보관하며 영화문서를 사회에 공개한다.

국가가 설립한 영화문서보관기구는 필수적인 설비를 갖추고 선진적인 기술을 활용해 영화문서 관리를 현대화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영화제작 업체 및 기타 단체는 「중화인민공화국당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영화문서보관 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국가가 설립한 영화문서보관기구에 영화문서를 제출·기부·보관해야 한다.

제3장 영화배급 및 상영

제24조 기업이 영화배급 업무에 필요한 인원과 자금 등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시, 국무원 영화주관부서 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영화배급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중 국무원 영화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은 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역 제한을 받지 않고 영화배급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기업, 개인 사업자가 영화상영 업무에 필요한 인원·장소·기술과 설비 등 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영화관 등 고정 상영 장소에서 영화상영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25조 본 법에 따라 영화의 배급·상영 업무의 심사 비준을 취급하는 영화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 또는 비준 불가를 결정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자에는 비준을 결정하고 영화배급경영허가증 또는 영화상영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이를 공포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에는 비준 불가를 결정하며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를 송부해 사유를 설명한다.

제26조 기업, 개인이 영화의 이동상영 업무에 종사할 시, 기업 명칭 또는 경영자의 성명·주소·연락처·상영 설비 등의 상황을 영업 지역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27조 국가는 농촌 영화상영에 대한 지원을 증대해야 하고 정부에서 출자해 농촌에서의 영화 공익상영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보완해야 하며, 사회 자금이 농촌 영화상영에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해야 하고, 농촌 지역의 영화관람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촌 지역 대중의 수요를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농촌의 영화 공익상영을 농촌 공공문화 서비스 체제 구축에 포함해야 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촌의 영화 공익상영 활동에 보조금을 배부해야 한다.

농촌 영화 공익상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허위 보고·사칭 등의 방법으로 농촌 영화 공익상영의

보조금을 수령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국무원 교육주관부서와 영화주관부서는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유익한 영화를 추천할 수 있으며, 조치를 취해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관람은 학교가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영화관과 영화 이동상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개인이 입장료 할인, 시설 조건이 상이한 상영관 개설, 지역사회에 상영 장소 설치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와 도시 저소득 거주민 및 도시 진출 근로자 등의 영화관람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영화관 및 영화 이동상영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개인의 소재지 인민정부는 이에 대해 권장 성격의 보조금을 배부할 수 있다.

제29조 영화관은 중국 국내 법인, 기타 단체가 제작한 영화의 상영 횟수와 시간대를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연간 총상영 시간은 연내 전체의 2/3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영화관 및 영화 이동상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영화의 상영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30조 영화관의 시설·설비 및 이동상영 기기는 영화상영 기술의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영화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산 매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제31조 권리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자도 상영 중인 영화를 녹음·녹화해서는 안 되며 녹음·녹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영화관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할 시 퇴장시킬 권리가 있다.

제32조 국가는 명시한 영화상영 시작 시간이 되기 전에 영화관이 관객에게 공익광고를 상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영화관은 명시한 영화상영 시작 시간부터 영화 상영 종료 시간까지 관객에게 광고 상영을 할 수 없다.

제33조 영화관은 치안·소방·공공장소 위생 등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상영 장소 내의 공공질서와 환경위생을 유지해 관객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어떠한 자도 폭발성·연소성·방사성·부식성 등의 위험물품을 휴대하고 영화관에 입장해서는 안 되며 총·탄약·단속 기구 등을 불법 휴대하고 영화관에 입장해서는 안 된다. 위의 물품을 불법 휴대하는 자를 발견할 시, 관련 직원이 그의 입장을 거부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 영화 배급사, 영화관 등은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영화 판매수입과 통계 수치를 제공해야 한다. 허위 거래 조작, 판매수입 허위 보고 등 부당한 수단을 취해 관객을 속이거나 오보로 영화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면 아니 된다.

제35조 중국에서 국제 영화제(전)를 개최하는 경우 국무원 영화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영화산업 지지 및 보장

제36조 국가는 아래의 영화를 창작, 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 ①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전파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는 중대 소재 영화.
- ②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영화.
- ③ 예술창작 성과를 구현하고 예술 발전을 촉진하는 영화.
- ④ 과학교육 사업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보급을 추진하는 영화.
- ⑤ 국가가 지지하는 정책에 부합한 영화.

제37조 국가는 관련 문화산업 특정 자금, 펀드를 인도해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각 단계와 시기의 영화산업 발전 상황에 따라 재정 능력 상황과 경제 사회발전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영화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포괄적으로 배정해야 하며, 관련 자금과 펀드의 사용 상황에 대한 회계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38조 국가는 필요한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해 영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서는 세금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제정한다.

제39조 현급 이상 지역의 인민정부는 인민대중의 수요 및 영화시장의 발전 수요에 따라 영화관의 건설 및 개조를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토지 이용의 총체적 계획과 도시·농촌 건설의 총체적 계획 등에 포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역의 인민정부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영화관의 부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기존의 영화관 부지 자원을 활성화해 영화관 건설을 권장해야 한다.

제40조 국가는 금융기구가 영화 업무의 종사 및 영화 인프라 시설의 개선에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며, 법에 따라 영화 관련 지적재산권에 질권설정 업무를 진행하고 신용대출을 진행하는 등 영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보험기구에서 법에 따라 영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보험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융자담보기구에서 영화산업에 융자담보를 제공하고 재담보, 연합담보 및 담보와 보험을 결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무원 영화주관부서에서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영화의 제작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출 기한과 이율을 확정한다.

제41조 국가는 법인, 기타 단체가 외국에서 영화를 합작 제작하는 방법으로 대외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법에 따라 대외 무역, 대외 융자와 투자 등 합리적인 외환 수요를 보장한다.

제42조 국가는 영화 인재 지원 계획을 실시한다.

국가는 조건부의 대학교, 중등 전문 직업학교 및 기타 교육 기구, 양성·육성 기구 등에 영화와 관련된 전공 또는 교육 과정을 개설해 다양한 방법으로 영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국가는 영화활동에 종사하는 법인과 기타 단체가 학교 인재 육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43조 국가는 대책을 세워 농촌·국경·빈곤 지역 및 민족 지역의 영화활동을 지원한다.

국가는 소수민족 소재의 영화 창작을 지원하고 격려하며, 소수민족의 언어·문자로 번안하는 업무를 강화해 민족 지역 대중의 영화감상 요구를 총괄적으로 보장한다.

제44조 국가는 우수 영화의 외국어 번역 제작을 권장하며 외교, 문화, 교육 등 대외교류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해 영화의 해외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국가는 국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영화의 해외 홍보에 종사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45조 국가는 사회 역량이 기부·후원 등의 방식으로 영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권장하며 법에 따라 우대한다.

제46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는 영화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고발을 다루는 즉시 사실을 조사하고 처리해 답변해야 한다. 영화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기타 단체와 개인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해 받은 행정처벌을 사회신용기록에 기록하며 이를 사회에 공포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47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영화제작·배급·상영 업무에 종사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에서 부여된 직권에 따라 영업을 금지하고 영화 필름과 불법 소득 및 불법 업무에 사용한 전용 도구, 설비를 몰수하며 불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고, 불법 소득이 없거나 또는 불법 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일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원 허가증 발급 부서에서 관련 허가증 또는 비준 서류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고, 현금 이상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에서 부여된 직권에 따라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고, 불법 소득이 없거나 또는 불법 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일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①본 법에서 규정한 허가증, 비준 서류나 증명 문서를 위조·변조·임대·대여·거래 또는 기타 형태로 본 법에서 규정한 허가증, 비준 서류나 증명 문서를 불법 양도할 경우.

②사기, 뇌물 공여 등 부당한 수단으로 본 법에 규정한 허가증, 비준 서류나 증명 문서를 취득할 경우.

제49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원 허가증 발급 부서에서 허가증을 취소하고 현금 이상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에서 부여된 직권에 따라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소득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고, 불법 소득이 없거나 또는 불법 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일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①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영화를 배급·상영할 경우.

②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영화 내용을 수정, 규정에 따라 다시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영화를 배급·상영·영화제(전)에 참여한 경우.

③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영화로 영화제(전)에 참여한 경우.

제50조 중국의 명예와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 안정에 해를 끼치며 민족 감정을 손상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외국영화 관련 현상 인화·가공·후반 제작 업무를 취급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에서 직무에 따라 분업해 위법 활동의 정지를 명하고 영화필름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고, 불법 소득이 없거나 또는 불법 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일 경우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화주관부서에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보해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제51조 영화 배급사, 영화관 등이 허위 거래 조작, 판매수입 허위 보고 등 부당한 행위로 영화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현금 이상 영화주관부서는 잘못을 시정하도록 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소득이 50만 위안을 넘는 경우는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업 정지를 명하고 상황이 특별히 심각할 경우에는 원 허가증 발급부서에서 허가증을 회수해 취소한다.

영화관이 관객에게 명시한 영화 상영 시작 시각부터 영화 상영 종료 시각 내에 광고를 상영했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에서 경고 조치를 취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2조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허가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국내에서 국제영화제(전)를 개최할 경우 국무원 영화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에서 직무에 따라 분업해 위법 활동의 정지를 명하고 행사에 참여한 영화필름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고, 불법 소득이 없거나 또는 불법 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일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처벌일로부터 5년 내에 국제영화제(전)를 개최할 수 없다.

개인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국제영화제(전)를 개최하거나 무단으로 영화공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영화를 제공해 영화제(전)에 참여할 경우, 국무원 영화주관부서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는 불법 활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영화제(전)에 참여한 영화와 불법 수익을 압수한다. 또한 불법 소득이 5만 위안을 넘을 경우는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소득이 없거나 금액이 5만 위안이 안 될 경우에는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처벌일로부터 5년간 영화 관련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53조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개인 사업자가 본 법규정을 위반해 허가증의 취소, 철회를 처벌받았을 경우 허가증 취소 및 철회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허가를 재신청해선 안 되고, 법인 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는 허가증 취소 및 철회일로부터 5년 내에 영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개인 사업자의 법인 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제54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①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영화로 오디오 제품을 제작했을 경우.
- ②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 전산 네트워크, 방송망 등 정보망을 통해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영화를 전파했을 경우.
- ③ 허위 보고, 사칭 등의 방식으로 농촌 영화 공익상영의 보조금을 기망한 경우.
- ④ 영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⑤ 법에 따라 영화기록보관문서를 접수·수집·정리·보관·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영화관에서 상기 제4항의 행위가 존재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원 허가증 발급부서에서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5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 업무 직원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지만 범죄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 ① 직무의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 또는 기타 이익을 도모한 자.
- ② 본 법을 위반해 심사 비준 활동을 진행한 자.
- ③ 감독의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자.
- ④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처벌하지 않은 자.
- ⑤ 농촌 영화 공익상영 보조금 또는 관련 특별 자금, 펀드를 횡령·유용·역류·착복한 자.
- ⑥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사욕을 채운 등의 상황.

제56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해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범죄 요건에 충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법 규정을 위반해 2년 내 2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자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또다시 처벌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행했을 경우 가중해 처벌한다.

제57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 및 업무 직원은 본 법이 규정한 처벌의 종류와 재량권을 엄격히 준수해 불법 행위의 성질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행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영화주관부서에서 제정한다.

현금 이상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는 본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경우 법에 따라 불법 행위와 관련되는 장소와 시설을 차압할 수 있고, 위법행위에 사용한 재물을 차압 및 압수할 수 있다.

제58조 당사자가 현금 이상 인민정부 영화주관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본 법에 따라 결정한 행정 행위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중 국무원 영화주관부서의 영화공영 불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행정재심을 거쳐야 하고 행정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59조 외국자본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영화기업을 설립했을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0조 본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